

개항기 조선의 콜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

박 한민 (朴 漢珉, 고려대학교)

【발표요지】

본 발표에서는 조선의 개항 이후 주기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던 대표적 감염병으로 콜레라에 주목한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개항장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검역규칙을 제정하는데 조선을 비롯한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한다. 1879년 조선과 일본 각지에서는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때 콜레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측은 19개 조항으로 된 「호열랄예방병취급방규칙」을 조선정부에 전달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것은 메이지 10년 내무성의 「호열랄병예방심득」과 메이지 12년 태정관의 「호열랄병예방가규칙」을 조합한 것으로, 조선 상황에 맞게 조항을 추가하였다. 콜레라 예방과 감염자 처리를 위한 관리규정을 양국이 새롭게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다만 격리병원설치와 위생에 대한 인식에서 조일 양국 간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1886년에도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개항장인 부산, 원산, 인천을 중심으로 조일 양국은 콜레라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조선의 각 개항장에서는 콜레라 유행에 대처하는 가운데 각국의 관리가 원활하게 공조하기도 했고,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검역 시행을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당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설정하며, 관련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했다. 검역규칙의 제정과 시행에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자국 거류민의 보호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따라서 시행하려는 취지가 좋고, 시급성이 있더라도 개항장에서 검역규칙 시행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관철하기란 어려웠으며, 타국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했다. 조선정부에서 기초한 검역규칙의 조항을 검토할 때 일본 측은 청국의 각국 조계와 이탈리아의 운영 사례까지 참고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경력】

한국근대사와 한일관계사를 전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 2017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국대학교역사교과서연구소에서 2년 간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박사 후 연수과정(Post-Doc)을 밟았다. 일본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에서 외국인 방문연구원, 교토부립교토학.레키사이칸에서 교토학연구원을 역임하면서 자료수집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교양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조선과 일본의 조약 운영, 일본 관원의 조선 출장과 정탐활동, 근대 지식의 수용과 유통, 조일 양국인의 교류와 인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